

대법원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①, ②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②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1. 사안의 개요

-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2018. 6. 21.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하 '①부분')이 기재된 제1기사를, 2018. 6. 23.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하 '②부분')이 기재된 제2 기사를 각 게재함

- 이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자신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참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위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권과 다른 별개의 특수한 권리로서, 그 보도가 허위이기만 하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더라도 행사가 가능함

2. 소송의 경과

- 제1심 ➡ 원고 패

-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됨

- 원심 ➡ 원고 일부 승

-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 위자료는 제1기사에 관하여 피고 1(언론사)과 피고 2(기자)가 공동하여

3,000만 원, 제2기사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3(논설실장)이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인용함

-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제1, 2기사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제1, 2기사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파기환송(일부)

다. 판단 근거

- ▣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 제1기사 중 ①부분은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제2기사 중 ②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은 국정원의 기획에 따라 검찰이 언론에 사건정보를 흘린 것임을 원고가 시인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
 - 피고들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제2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 제1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움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 제1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
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당시 시계수수 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되었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하였을 것
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음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

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제1기사의 전체적인 내용도 당시 논란이 되었던 원고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 및 원고의 소재파악에 대한 보도에 보다 더 주안점이 있었고, 제2기사와는 달리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1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4.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제2기사 중 ②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이와 달리 제1기사 중 ①부분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은,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음